
초광역협력 지원전략(안)

2021. 10. 14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초광역협력 비전 및 목표, 지원전략	2
III. 초광역협력 지원방안	3
1. 초광역협력 지원 기본방향	3
2.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	3
3.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	5
4.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	7
IV. 향후계획	10
V. 기대효과	10
VI. 과제별 추진일정	11

I. 추진배경

①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문제 해결

-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 문제* 및 교통혼잡**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

* (주거)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('20년 기준) : 수도권 (8.0배) > 전국 (5.5배)

** (교통)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35.4조 (전국 대비 52.2%)

-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 지역 위기* 대응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·생활권 육성을 통한 분산 필요

* (인구) 전체 인구의 50.2%, 청년층의 56.2%가 수도권 거주('20년말 기준)

(격차) 수도권-비수도권 지역총생산(GRDP) 격차 확대 : ('10) △1.3%p → ('19) 4.1%p

일반대 신입생 충원을 : 수도권 (99.2%) > 비수도권 (92.2%) ('21년 기준)

② 미래환경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기후변화,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
 - 교통·기후 등 기능별 유연한 권역 형성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문제 해결, 융복합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·집적의 이익 실현
-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간 협력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

- (미국) America 2050을 통해 10개 대규모 초광역권(Mega-region) 구축전략 추진
- (영국) City-Regions 정책을 통해 맨체스터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 형성
- (일본)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통해 3대 초광역 거대도시권역 형성 구상

③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적 협력 움직임 활발

- 지난 정부 광역권 사업*은 정부 주도, 획일적 방식 등으로 지속 추진에 한계

* (이명박 정부) 5+2 광역경제권 (박근혜 정부) 시·군·구 연계를 통한 생활권 중심 정책

구 분	과거 정부	문재인 정부
주 체	▲ 중앙정부 주도, 하향식	지역 주도, 상향식
권 역	▲ 획일적·인위적 분할	유연하고 다양한 협력
분 야	▲ 산업·관광 등 특정 분야	전 분야
거버넌스	▲ 상호 권한과 책임 미흡	다양한 추진·지원체계 확보 (특별지자체 등)
지 원	▲ 부처별 칸막이 지원	부처 간 협력으로 맞춤형 지원

- 과거와 달리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움직임 활발

- 「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('21. 2)」는 초광역협력 필요성 공론화의 계기, 대구·경북, 광주·전남, 충청권 등도 특별지자체 설립 및 행정통합 등 논의 착수

II. 초광역협력 비전 및 목표, 지원전략

① 초광역협력의 개념

- (개념) 지역 주도의 ^(주체) 연계·협력을 통해 ^(방식)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^(공간) 초광역적 정책·행정수요에 대응하여 ^(내용) 지역의 경쟁력 제고 ^(목적)

※ (메가시티와의 관계) 메가시티는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서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, 초광역협력은 기능적·공간적 협력을 포괄

② 비전 및 목표, 지원전략

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 "초광역협력"

비전

유연한 권역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

목표

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**지역 경제·생활권**으로의 육성

지
원
전
략

기반구축

지역 주도 협력체계

①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

② 협력단계별 차등지원
: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

공간

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

③ 단일 경제·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

산업

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

④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

사람

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

⑤ 지역대학 혁신 및 교육·일자리·정주여건 연계
: 초광역 선순환 체계 구축

III. 초광역협력 지원방안

1 초광역협력 지원 기본방향

- ① 초광역협력 지원의 **법적 근거** 및 재정지원 체계 등 **기반을 구축**하고,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**범정부 통합지원 체계** 마련
- ② 지역 간 **협력 단계별 차등지원**으로 **신속한 성공모델 창출** 및 **확산**을 유도
- ③ 국토교통·산업·인재양성 등 **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**을 도입

2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

① 초광역협력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

- ① (법적근거) 균특법에 초광역권 정의, 초광역협력사업 추진·지원근거 마련, 국토기본법·국토종합계획에 공간구조·발전전략 등 초광역권 계획 도입
- ② (계획수립) 지역 주도로 수립한 「초광역권발전계획」에 대해 범부처 협의·조정 등을 통해 확정 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

②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

- ① (예비타당성 조사)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조정* 추진
* (현행) 총사업비 500억원, 국비 300억원 → (검토) 1,000억원, 국비 500억원
- 시급·高투자효과 초광역협력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*
*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중 500억 미만 사업 대상 투자심사 면제 검토 및 수시심사 적극 활용
-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연계,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기준 상향 검토
- ② (예산편성) '22년 초광역협력 시범사업 반영(223억원), 국고보조율 상향(50→60%)
- 광역 간 연계·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“초광역협력 사업군* (지역지원계정)”으로 선정·관리, 규모 확대 및 균특회계 인센티브 지원
* SOC(거점·광역교통망 구축), 경제(산업기반 조성), 문화(광역관광개발사업), 교육(RIS) 및 이를 융합한 사업
- ③ (평가·집행) “초광역사업 평가체계” 마련, 평가결과 및 예산 연계 추진
- (초광역협력지표) 초광역협력지표* 개발로 공모사업 선정(가점 부여) 등에 활용
* 지역 간 연계·협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·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·정성 지표로 구성

③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

- ① (협력추진 지원) 지역 추진체계 간 연계·협력 지원, 초광역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,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연계·협력 실적 반영 검토
- ② (범부처 사업패키지 지원) 범부처 '초광역 사업 지원메뉴판'을 구성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맞춤형 지원
 - * 균특회계 우선 지원, 컨설팅 외 협약절차 간소화 및 개별 공모절차 면제 등 추가 제도개선
- ③ (조직·인력) 초광역협력 사무 증가에 대한 지방인력 수요를 지자체 기준 인건비 산정 시 적극 반영
- ④ (지역균형 뉴딜 연계) 초광역 단위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디지털·그린 新성장동력 마련 추진
 -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역균형 뉴딜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, 균특회계 인센티브 등 연계 지원

④ 범정부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

- ① (협의회) 중앙부처 연계·협력, 통합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·조정기능을 수행하는 "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(가칭)" 신설
 - (구성) 국무조정실장이 총괄,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
 - (역할) 부처별 정책·과제 점검 및 실행전략 마련, 행·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협의·조정, 지역별 맞춤 지원 등
- ② (전담조직) 「초광역협력 지원전략」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 초광역협력 총괄지원·관리를 위해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
- ③ (전문기관) 초광역협력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선정·컨설팅 및 지역 추진체계 등을 지원

* 균특법 시행령 제30조·31조 균형발전 전문기관 활용

3

협력단계별 차등 지원 :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

① 견고한 연계의 형태 및 지원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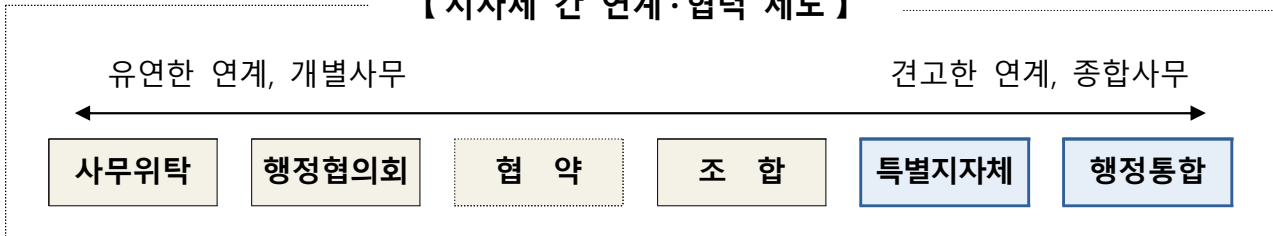
○ 초광역협력의 안정성·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시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유도

- 행정협의회* 등 유연한 형태의 협력은 시범사업 추진 등 초기 협력에 활용, 고도화된 협력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**, 행정통합 등이 적합

* 행정협의회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(174개) 중 '20년 계속사업은 14.4%(25개)에 불과

**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(지방자치법 제12장, '22.1월 시행)

【지자체 간 연계·협력 제도】



②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

① [설치·운영 지원]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설치 및 안정적 운영 지원

- (재정)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소요자원*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, 구성 지자체 대상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등 지원방안 마련

* 특별지자체 설립에 따른 사무공간 설치,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비용

- (조직·인력) 별도 기구·정원 규정 마련, 출범 준비 기구·인력 적극 지원*

* 현재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·운영중('21.7~)

- (계획 수립)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(이하 '초광역계획') 수립 기획 비용 지원, 사무 발굴 및 규약 제정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

*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 선도모델 지정·운영 추진

- (시범사업 지원)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*를 활용하여 시범사업 지원 및 초광역협력사업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

* (사례) '21년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발굴·확산에 300억 원 규모 지원

② [국가사무 이관]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 추진

- (기본방향) 기존 시·도 경계를 넘어서는 국가사무(예. 광역교통·환경 등 특행 기관 사무)라도 보충성 원칙에 따라 특별지자체 위임 추진
- (절차) 위임요청 시 관계부처 검토 및 행안부 협의를 통해 분권협약 체결
 - * 특별지자체 설치 전에는 구성 지자체가 국가사무 위임 요청
- (지원방안)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인력·예산 동시 이관* 원칙
 - * 국가사무 위임 시 비용평가 등을 통해 행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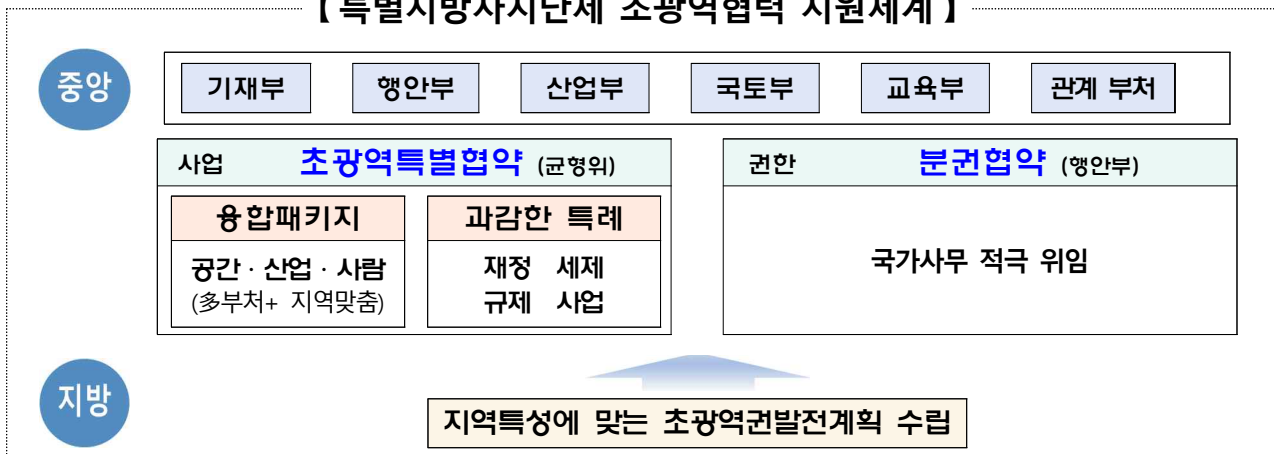
③ [초광역특별협약] '초광역계획'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

- (대상) 초광역협력의 지속·안정성을 보유한 특별지자체·통합자치단체
- (내용) 맞춤형 「사업패키지¹⁾+지원특례²⁾」 설계 ⇨ 부처와의 협약체결³⁾

- 1) (사업패키지) 多부처 사업 메뉴판(신설) + 대상 지자체 요청 신규사업
- 2) (지원특례) 재정(예타 등 신속 추진, 국고보조율 인상 등), 세제*, 규제(기준완화 등), 지원사업 특례(우선선정 등) 등 지역에 맞는 과감한 지원 설계
 - * 향후 초광역특별협약이 구체화 되는 경우 관련 세제 지원 검토
- 3) (협약체결)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 검토, 균형위 심의를 통해 체결

- (제도화) 법적 근거 마련(관련 조항 신설 등) 및 주관부서 등 제도화 방안 검토

【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】



③ 행정통합 지원체계 마련

-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
 -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절차 및 각종 행·재정적 특례 마련을 위해 「지방분권법」 개정 추진 (행안부분권위 및 관계 전문가 TF 구성·운영, '21.10~)

1 [공간] 단일 경제·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

① 네트워크 연계의 핵심요소인 광역 교통망 조성

- (광역철도) 초광역권 핵심축인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,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광역철도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등 초기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강구
- (광역교통시설) 철도와 연결되는 광역 BRT·환승센터, 순환형 도로망에 연결되는 방사축 신규 도입 등으로 중심부·주변도시 간 연결성 대폭 강화*
- * 초광역권의 추가 광역교통망 수요는 타당성을 점검하여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등 추진
- (소외지역 맞춤형 교통) 대중교통 취약지에 저렴한 택시서비스(100원 택시) 및 대체버스(소형·콜) 지원 확대, 첨단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추진
- (공항) 지방거점공항 중점투자 진행 (가덕신공항은 '22년 중 사업추진방안 마련)

② 인재·자본·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거점 육성

- (중심거점) 광역교통 중심지에 최고 수준 특례*가 적용된 도심융합특구**와 기업·주거·청년인재가 융합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하여 거점으로 육성

* 각종 특구 중복 지정, 창업패키지사업(중기부), 지자체·대학 지역혁신사업(교육부) 등 종합지원

** 초광역권 내 성장거점 확대를 위해 지방광역시(5곳) 외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에도 추가 추진

❖ 초광역권 혁신도시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,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거점 역할*을 본격적으로 수행

* 혁신도시형 도점산단(비즈파크), 혁신융합캠퍼스, 공유오피스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

❖ 우수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 플랫폼* 조성

* 육·해·공 물류통합운영모델(트라이포트) 검토 등 ('22년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 예정)

- (자족거점)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거플랫폼(주거+생활SOC+일자리) 확대*,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·도시재생 추진 병행

* (기존) 농산어촌(읍·면 지역)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→ (변경) 시·군(읍·면·동) 단위로 확산

② [산업]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

①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 선정·지원

- 초광역권 단위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*하고 범부처 공동 지원

❖ 지역뉴딜 등 산업정책과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도 전략산업 선정*

* (지역) 진단·전략산업 제시 → (초광역권) 추진계획 제출 → (중앙부처) 컨설팅 → (균형위) 심의의결

❖ 지역수요와 성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하고,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한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

-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선도, 후속사업 순차적 추진

【 기존 전략산업 정책과의 차별성 】

구분	선정주체	지원대상	산업 육성방식
기 존	중앙정부 주도	개별 시·도	사업 단위 부처별 추진
초광역	지방정부 주도	시·도 간 연합체	산업 단위 범부처 추진

② 초광역권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충

- 초광역권 전략산업의 핵심 인프라 우선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*

* 초광역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신설(사업규모·범위 확대 등), 미래산업 공동 인프라 (예시: 탄소중립·AI 등) 우선 구축을 위한 초광역단위 관계부처 협업 체계 구축 등

- 초광역 단위의 산학협력 및 산업·기술인력 공급체계 구축*

* 전략산업 중심의 계약학과 운영,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지정·확대(R&D, 인력양성 프로그램), 지방대학과 산단·경제산업특구 간 산학협력 체계 구축(교육훈련, 창업플랫폼) 등

- 초광역권 산업지원을 위한 지역의 산업거점·혁신거점 마련 및 연계 강화*

* 경제특구·경제자유구역 간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, 既 운영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·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등을 초광역 혁신거점화, 초광역 산업·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 등

③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 환경 조성

- 초광역지역의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투자 재원(펀드 등) 지원 검토

* 정책투자(초광역협력, 상생형일자리, 지역뉴딜 등) 펀드 확대, 투자·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

-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마련*

* 허브기업군 투자유치를 위한 조달·국고보조·R&D 매칭 등 검토

- 지역투자 촉진제도 체계화를 위한 「지방투자촉진법」 제정* 등 검토

* 지역투자 촉진제도 체계화, 허브기업 중심 투자유치, 초광역단위 투자유치 추진체계 등

③ [사람] 지역대학 혁신 및 교육·일자리·정주여건 연계

① 초광역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

-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체계 마련

❖ 대학별 강점 결집·역할 분담을 통한 초광역형 공유대학* 모델 수립·운영

* 울산·경남(스마트제조·미래모빌리티 USG공유대학), 광주·전남(에너지신산업 IU-GJ) 등

❖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유형으로 제도화하고 학위인정 검토

-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산·학·연 공간 융합 우선 지원

❖ 지역혁신 플랫폼(교육) + 도심융합특구, 캠퍼스 혁신파크(일자리·정주) 연계

❖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확대 검토 및 혁신도시 내 캠퍼스 이전·운영 지원*

* 교지(校地)·교사(校舍)요건 등 이전 특례인정을 위한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개정 추진중('21.12)

② 초광역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

- 지역혁신플랫폼 간 단계적 연계, 확장·전환 지원 및 확대 검토

❖ 기존 플랫폼 성과와 지역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초광역형 모델* 마련

(플랫폼 간 연계·확장·전환 등)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

* (예시) 울산·경남 → 부산·울산·경남 초광역형, 대전·세종·충남 + 충북 → 충청권 초광역형

-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 구축

❖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*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) 운영

*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지역에 최대 6년(4+2년) 맞춤형 규제유예 도입

❖ 초광역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캠퍼스 공간, 학사제도, 교원 등 규제 개선

③ 초광역권 단위 지역 협업체계 및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

-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초광역 지역혁신 동력 확보

❖ 지역협업위원회, 협업 전담기관 등 지자체·대학 간 협업체계 법제화

* ('21) 광주·전남, 대전·세종·충남, 울산·경남, 충북 등 4개 권역에 1,710억원 지원

-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

❖ 부처 인력양성 및 지역혁신 사업 간 협업과제 협의 등 공동운영 체계 마련

❖ 특별지자체·지역협업위 등이 발굴한 초광역 협업과제의 범부처 지원방안 모색

IV. 향후계획

- 초광역협력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('21년말)
-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지원('22년 상반기) ※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(22.1.13)
-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 반영('23년 상반기)

V. 기대효과

① 초광역협력 성공모델 조기 안착 및 확산을 통한 지속발전체계 구축

-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모델의 조기 성과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
-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행정통합을 통해 다양한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

② 좋은 일터·삶터·배움터가 함께 하는 지역으로 육성

-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수한 인재 유입 촉진 및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탈 방지
- 양성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

③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시간 이동 생활권 조성

- 초광역권 거점 간 1시간 내 이동가능(기존 50%↓, 철도 기준)하도록 교통망을 조성하여 지역 성장잠재력 제고

◆ 초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변화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부울경 (진영~울산) : 135분 → 37분 | ② 광주·전남 (광주~나주) : 81분 → 33분 |
| ③ 대구·경북 (대구~의성) : 118분 → 29분 | ④ 충청권 (대전~청주공항) : 90분 → 43분 |

- 초광역권 내 중심거점 및 자족거점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
-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 생활권에서 경제·교육·여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1시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조성을 통해 **매력 있는 지역삶터**를 구현, **수도권 집중 완화**
⇒ **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** 및 **수도권·비수도권 상생 발전**

VI. 과제별 추진일정

1.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

① 초광역협력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

▪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	'21.9~	산업부
▪ 국토기본법 개정	~'22	국토부
▪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심의·의결	'22.上	균형와각부처
▪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 반영	'23.上	산업·국토

②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

▪ 우수 초광역협력사업 균특회계 차등 지원 검토	'24~	기재부
▪ 초광역협력 신규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	'21~	기재부
▪ 초광역협력 사업군 선정	'22~	기재부
▪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	'22~	행안부
▪ 초광역협력지표 개발	'21.11~	균형위

③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

▪ 초광역협력사업 발굴·기획 및 시범사업	'22~	균형와각부처
▪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연계·협력 실적 반영 검토	'22.10~	행안부
▪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개선, 맞춤형 지원	'22~	국토부

④ 범정부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

▪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신설	'21.11~	전 부처
▪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 검토	'21.11~	행안부

2.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 :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

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

▪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 및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지급	'21.12~	행안부
▪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기구·인력 지원	'21.6~	행안부
▪ 분권협약 체결 지원	'22~	행안부
▪ 초광역특별협약 제도 도입 및 체결지원	'22~	균형위 각부처

② 행정통합 지원체계 마련

▪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TF 운영	'21.10~	행안·분권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

3.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

① [공간] 단일 경제·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

▪ 단계별 거점 육성 진행	'22~	국토부
▪ 광역 교통망 사업 순차적 절차 진행	'21~	국토부

② [산업]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

▪ 지역 주도 전략산업 발굴·선정 제도기반 마련	'22.上	산업부
▪ 전략산업 시범사업 추진	'22~	산업부
▪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	'22~	산업부
▪ 지방투자촉진법 제정	'22~	산업부
▪ 지역혁신 클러스터간의 연계·협력 강화	'21~	산업부
▪ 스마트특성화사업 재편	'22~	산업부
▪ 국가혁신클러스터 개편	'23~	산업부
▪ 지역대학 내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조성	'23~	산업부
▪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	'23~	산업부

③ [사람] 지역대학 혁신 및 교육·일자리·정주여건 연계

▪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 수립·운영 지원	'21~	교육부
▪ 공유대학 제도화 추진	'22~	교육부
▪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	'21~	교육부
▪ 고등교육 규제특구 운영	'22~	교육부
▪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	'21~	교육부
▪ 지역협업위원회, 전담기관 등 지자체-대학 협업체계 법제화	'21~	교육부
▪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	'22~	교육부